

1920-30년대 "조선인 군중 소요"와 식민지 군중의 정치동학

기유정(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1. 문제의식
2. 식민지 “군중” 담론
3. 군중과 “사건의 철학”
4. 군중과 ‘사건의 정치’
5. 결론
6. 후속 연구: 군중 정치의 이항화와 폭력(반동)적 군중 연구

1. 문제의식

한국 정치는 다른 어떤 민주국가들보다도 일반 대중과 이들에 의한 ‘광장정치’가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강준만 2012; 최장집 2020). 이 같은 “대중 정치적” 경향성은 한국 정치의 역동성과 민주화를 견인한 중요한 동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善惡)이나 우적(友敵)의 이분법이 쉽사리 고착화하거나, 엘리트들의 정치적 역량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동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 대중 혹은 군중이라고 불리는 불특정 다수자들의 행위 패턴과 그 정치 파급력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 무차별적 다수자를 가리키는 한국어의 여러 용어들 중에서도 ‘군중’은 특히 이 같은 다수자의 타자성을 훨씬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정치학에서 대중이나 민중 혹은 다중이란 용어가 여러 정치철학적 의미에서 소환될 때조차도 이 다수자를 군중이라고 부르는 것은 회피되는 경향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영어나 독어 그리고 프랑스어 상에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군중(群衆)’이라는 용어는 ‘군중심리’라는 용어를 함께 하면서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떠한 자기 지성도 같이 못한 이들이 모여 피선동적으로도 구화된다고 보는 이미지를 갖는다.¹⁾

그러나 군중에게 부여된 이 같은 부정적 가치평가가 군중이란 용어에만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실 공간에서든 가상공간에서든 다수자들의 운집에 의해 정치적인 극단현상이 발생하고 그것이 엘리트 정치의 선택을 좌우하게 될 때, 다수자들의 정치를 향해 그 의식성(이성적 판단력)과 주체성(개별자의 다양성)의 결여를 묻는 논쟁은 언제나 함께 해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중이라는 기호가 한자로 “큰 무리”라는 정제된 특정 상태의 집단을 가리키는 것에 비해, “무리지어 모인다”는 동적 의미를 보다 내재하고 있는 ‘군중’은 다수자를 그 운동의 관

1) 엘리야스 카네티(2012)의 『군중과 권력』에서 “군중”은 “masse”로서 영어의 대중(mass)과 사실상 어원이 같다. 또한 들뢰즈(2001)의 『천의 고원』에서 “군중”의 원어 역시 “masse”로서 이 역시 영어의 대중과 다르지 않다. 르봉(2014)의 『군중 심리』와 타르드(2012)의 『여론과 군중』에서 군중은 원어가 “foule”로서 들뢰즈나 카네티와 구별되지만 foule과 masse가 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접근되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군중과 대중으로 구분하여 번역하고 있는 foule과 mass, masse는 모두 다수의 무리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점에서 보게 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기는 1차 대전 이후 전 세계의 정치가 이들 다수자를 자기 진영의 주체로 만들기 위해 경쟁하던 시기로서, 3·1운동을 거친 조선에서도 소위 “조선인 군중 소요”라는 것이 하나의 현상처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빈발하면서 이른바 “기미년 이후 조선민심의 대변화”라는 것이 공공연히 논의될 정도였다.²⁾ 이런 시대 상황 때문에 당시 식민권력을 비롯한 조선 식자 층 안에서 다수자 정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규정할 것인가를 “민족”, “계급” 혹은 “군중”이라는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1920년-30년대 이후 이 “군중”을 둘러싼 당대의 인식 틀을 분석하고 언론에 “군중 소요”라는 제목 하에 보도되었던 그들의 행위 동학을 분석하는 것은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운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역사학계는 2000년대 이후 윤해동의 “식민지 회색지대론” 이래로 지배와 저항의 이분법을 넘어서 다양한 정치 영역을 실증적으로 많이 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석 대상이 주로 조직화된 단체와 정치 엘리트 그리고 이들의 정책적 성과에 집중되어 다수자들의 정치는 그 동원의 결과로서- 부수적으로만- 다루지는 경향이 강했다(김제정, 2014; 지수걸, 1996; 윤해동, 2004; 전성현, 2020). 또한 “식민지 대중” 연구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졌던 기존 연구들, 예를 들어 형평사 운동을 다룬 연구나(천정환, 2008), 1920-30년대 식민지 지식인의 “대중”인식에 대한 연구(허수, 2010)의 연구 역시 이 시기 대중의 사회적 “의미”에 집중할 뿐, 그것의 행위 “동학”이라는 정치 논리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 위에서 1920년대 경부터 폭발적으로 등장했던 지식인 및 식민권력의 “군중” 담론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이 같은 담론이 당시 소위 “조선인 군중 소요”라는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갖는 한계는 무엇인지를 확인한 이후 새로운 개념적 틀의 소개 위에서 ‘식민지 군중의 정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식민지 “군중” 담론

1) 군중과 병리학적 접근

1927년 『중외일보』에 실린 「웅변학상으로 본 군중론」에서 최화숙은 조선인 사회가 “기미년 사건 이래로 군중 심리상 일대 격변을 야기”했고 이는 “일반이 공인하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당시 언론계는 이 같은 기미년 촉발 민심 상의 변화가 1920년대 이후 학생계와 노동계 사회운동계 기타 각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중에서도 1920년대 빈번하고 있던 동맹휴교사건이나 1931년 중국인 배척 사건을 그 대표적 예로 들고 있기도 했다. 김현준(1931)은 이 같은 변화를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었는데, 1918년 독일 혁명과 1919년 3월 1일의 기미년 사건, 그리고 같은 해 8월의 일본인쇄공 동맹파업과 동경 각 신문지 휴간이나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과 그리고 1926년의 영국 산업 파업, 인도민족운동 등, 20세기 초 전 세계를 휘젓고 있던 혁명의 열기가 조선에서도 “군중”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즉, 더 이상 “사회적 현상의 중심이 영웅이나 천재의 위대한 힘이 아니고 개벽의 중심점의 위력이 없어지는 동시에 다수인의 단체가 사회적 세력의 중심이 되어가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었다(최화숙, 1927).

2) 이광수, 「민족개조론」, 『개벽』22, 1922년 05월 01; 최화숙, 「웅변학상으로 본 군중」, 『중외일보』, 1927년 6월 12일).

그런데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위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 같은 시국을 움직이는 주체의 행위 논리로 최근 “군중 심리”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들이 소개하고 있었던 군중 심리란 귀스타프 르봉을 위시한 샤르코, 에스퀴, 비샤 등에 의해 1880년대와 1890년대에 발전했던 유럽의 대중심리학의 결과로서 1912년 이후부터 일본에 들어와 러일 전쟁 이후 일본에 나타났던 수많은 정치적 혼란들(제1차 호헌운동, 시베리아출병, 쌀폭동, 관동대지진, 토라노몬 사건, 제2차 호헌운동 등)을 설명하기 위해 번역 소개되었던 이론이었다(樋口秀雄, 1913:1-3). 그것이 3.1운동 이후 조선인 지식 사회에 수입되어 조선인 사회의 민심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성적 개인이라는 정상인이 군중이라는 다수자 속에 들어갔을 때, “익명성. 무책임. 감염성. 최면상태. 피암시성. 최면술”에 의해 “파죽지세로 어떤 행동에 돌진해 들어”가는 일종의 병리적 상태를 가리키고 있던 군중심리는 1921년 『동아일보』 사설에 그 내용이 소개된 이후, 1930년대 초반까지 큰 틀에서 내용의 변화 없이 같은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된다.³⁾ 그리고 이 군중 심리학에서 당시 조선 지식인 사회가 주목했던 것은 다수자의 심리적 일체감으로서, 이들은 이 같은 일체감이 개인 의식의 소멸과 특정 “선동자”에 의한 통제에 의해 가능해진다는 점이었다.

이 같은 당시 대중심리학의 논의 속에 들어있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개인 대 비합리적이고 감성적인 군중’이라는 대당은 기본적으로 이성적 개인(백인, 성인, 부르주아, 남성)을 정치적 주체로 설정하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전제에 따른 것으로서, 무차별적 다수자들이 하나의 무리처럼 움직이는 군중의 행위는 개인의 이성적 자유가 박탈된 병리적 현상이며, 깨어있는 특정 선동가에 의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다수자들에 의한 자생적인 정치는 그 자체로 인정되지 않고 타자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군중이라는 기표가 갖는 다수자 정치에 대한 피식민 지식인 계급의 이 같은 병리학적 관점은 식민자 세력의 그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었다. 『경무회보』에서의 범죄학과 군중 심리의 관계에 대한 접근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中村古峽, 1931). 이 같은 군중심리학적 관점에서 기미년 이후 조선인 사회민심의 변화와 세계 사조의 변화를 읽고자 했던 이들의 논리는 식민 세력의 논리와 중첩되어 그들이 이를 의식했던 하지 않았던 이 같은 자유주의적 정치 철학의 다수자 정치에 대한 인식을 일정하게 조선 사회 안에 전파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지식인 사회의 군중에 대한 이 같은 병리학적 인식은 다른 한편에서 주체적 다수자 혹은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다수자의 필요와 그 존재에 대한 강조와 병존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민족 혹은 계급론의 관점에서 군중을 대신할 수 있는 “주체”(계급 혹은 민족)를 구성하려는 논리였다.

2) 군중과 사회·민족주의적 접근

1924년 4월 24일 『동아일보』는 「대중의 총명」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사설을 기고하고 있었다.

“지금은 선전의 세상이다. 정치가도 선전, 종교가도 선전, 상업가도 선전, 사상가도 선전, 모든 사람의 정력은 선전에 집중되는 감이 있다...따라서 모든 것이 민중화되어 오는 금일에 선전이 유행됨은 실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러함과 같이 선전은 선용되는 동시에 악용도 된다. 진상의 소개 내용의 단명 등 정당

3) 『동아일보』, 「군중심리」, 1921.3.17.

한 선전 이외에 허위와 오독도 선전되며 심하면 이 문명의 방편이 결함 중상의 악덕에까지 이용된다. 그러나 이들 부정의 선전이 대중을 우롱하는 최악일 것은 물론이다....선전을 이용한다함은 즉 대중의 위력을 인정한 까닭이다. 그러나 세인은 대중의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은 대중을 가르쳐 우중이라 하며 또 군중심리는 그 집단 중의 最劣等 지능을 대표한다 하야 幾分の 모멸감까지 가지고 있다”⁴⁾

이 사설에서 대중은 시대의 변화된 흐름을 보여주는 표징이자 정치의 새롭게 떠오르는 주체이다. 대중의 “위력”은 바로 이들이 새로운 정치의 주체가 되도록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 속에서 위 글은 이 “대중”과 “군중”을 분명하게 구별시킨다. “군중”은 “군중 심리”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대중”(愚衆=群衆)이었기 때문이다. 군중이라는 용어와 항상 함께 붙어다니는 “군중심리”라는 표현은 대중의 지성이 부정되고 대중을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는 기표이다. 군중과 군중심리는 “선전으로서 대중을 희롱코자하며 권력으로서 대중을 압박”하고자 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가치 절하된 대중을 지칭하는 기호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논설은 “대중은 이미 각성하였으며 이미 동요되었다”라고 주장하며 글을 맺고 있었다. “대중의 총명” 즉, “대중”이 “군중”과는 다른 종류의 다수자임을 강조하는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처럼 대중을 자각적 주체로 보는 접근은 사회주의 성향의 지식인들에게 “대중”이 “계급”을 표현하는 다른 기표로 사용되게 되면서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1920년대 중 후반에 언론을 통해 등장했던 “대중”이란 기호는 당시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그 이념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계급”이란 용어를 대신해 사용하고 있던 대체 기표였기 때문이다.

“조선노동총연맹”이 1924년 9월 한재(旱災)와 총재(蟲災)로 인해 그 해 흉년이 예고되고 있던 시점에서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게재했던 「화재와 무산 대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조선 노총이 농민 무산 대중의 한재 대책의 강구를 위해 농촌 피해 상황을 실사 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로서 대중=(무산) 계급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비상한 때에 임한 무산 대중아! 더욱 침착하고 견실하려야! 그리하여 내부의 결속을 더욱 굳게 하고 너의 오늘의 경우를 굳게 깨달아라”⁵⁾

대중이라는 무차별적 다수자 앞에 “무산”이라는 수식어를 첨가하여 “대중”의 의미를 “무산자(無產者)”로 완결시키려 했던 이 같은 작업은 명확히 대중의 계급화, 계급으로서의 대중을 의도하고 있었다. 대중의 이 같은 계급화는 일종의 자기 각성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우선 “마침내 시세의 추이를 따라 대륙을 통하여 흐르는 붉은 사조”가 인류의 역사를 “다수인의 해방과 자유로운 방면”으로 “진보”시켜간다는 것에 대한 각성이며, “선명한 계급의식 지배 하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정치 주체로서 자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⁶⁾ 따라서 이 같은 계급으로서의 대중은 우리에게 보다 친숙한 “민중”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고 있었다. 1925년 조봉암 등이 주축이 되어 강원도에서 열렸던 강연회는 제1일의 강연 제목이 “대중의 장졸이 되어”로 시작해 제2일의 “수평의 세계”를 거쳐 제3일 “미래는 민중의 것이다”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⁷⁾.

그러나 이처럼 ‘다수자’에 대한 계급화를 “대중”과 “군중”의 구별 속에서 이루고자 했던 사회주의적 접근법은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주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이들은 특정한 방식의 의식화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앞서 병리학적 관점의 군중론이 다수자를 접근

4) 『동아일보』, 「대중의 총명」, 1924. 4.24.

5) 『동아일보』, 「화재와 무산대중」, 1924. 9.24.

6) 『동아일보』, 「과도기에 임하야. 대중아. 자중하라」, 1925. 9. 14.

7) 『동아일보』, 「사상대강연」, 1925. 2. 27.

했던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논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 “군중”을 “개인”으로서의 자각을 결여한 존재로 군중을 접근했듯이, 사회주의 정치 철학은 개인이 아닌 특정한 “전체” 속에 자신이 귀속된다는 것의 자각을 결여한 존재로 군중을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사회 공간 곳곳에서 형성되어 몰려다니며 소란을 일으키고 있던 이 위험한 다수자들에게 계몽의 방식으로 각성되어야 할 특정한 실체(개인으로서의 이성 혹은 계급으로서의 자각)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것을 통해 다수자를 호명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사회주의 철학이 다수자와 군중을 접근했던 방식은 동일했던 것이다.

이 같은 사회주의적 좌파세력과 자유주의 사이의 군중에 대한 공통된 전제는 민족주의(우파)에게도 공유되는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3.1운동 이후 조선의 “민족 개조”를 외치고 있던 이광수의 경우였다. 이광수는 1차 대전 이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흐름을 “개조” 사상이라고 정리하고, 이를 단순한 관습 및 문화의 변화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작년 삼월 일일 이래로 우리의 정신의 변화는 무섭게 급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금후에도 한량없이 계속될 것이외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의 변화외다. 또는 우연의 변화외다. 또는 무지몽매한 야만인종이 자각 업시 추이하여 가는 변화와 가튼 변화외다...그와 가티 문명한 민족의 특징도 자기의 목적을 의식적으로 확립하고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적이며 통일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적이며 통일적인 노력을 함에 있습니다.”⁸⁾

이광수에 따르면 기미년 이후 조선 민심의 변화는 분명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 그것이 문명된 “민족”으로의 탄생 즉 “민족의 개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치절하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기미년을 통해 나타난 대중의 변화가 “자연의 변화”이자 “우연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광수는 진정한 민족의 변화 즉 “개조”란 목적과 계획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통일적인 노력을 수반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조선의 다수자 운동에게 이 같은 종류의 “조직성”과 “통일성”의 일관된 노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논의는 각각 ‘개인’, ‘계급’, 그리고 ‘민족’이라는 인식 틀에 의거해 군중이라는 존재가 전 자각적 존재이자 계몽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런데 위에서 이광수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민족화”해야 할 자연의 산물인 군중은 -앞서 동아일보의 사설처럼- 분명히 어떤 “위력”을 가진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이광수가 이야기한대로 민족이 되지 못한 군중이 갖는 비목적성과 무질서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아래에서는 군중을 정치적으로 “위험한” 존재로서 접근함으로써 이 “위력”의 내용을 확인시키고 있었던 또 다른 논의를 살펴본다.

3) 군중: 그 위험성

“조선에 있어 취단, 즉 단체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에는 크게 민족운동, 사회주의 운동을 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되는 회, 조합 등이 무수히 존재한다. 이것들은 특정한 규약 하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영속성을 가진 취단이지만, 이러한 종류와는 얼마간 나아가는 바가 다르고, 일정한 규약 혹은 영속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취단이 있다. 그것은 군중이다...그럼에도 무조직적이지만, 취단 구성이 용이하고, 무질서적인 만큼, 책임감이 희박하기 때문에 의외의 행동을 감행하는 것이 적지 않다.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平生 주의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사건이 예측할 수 없을 때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질서 있는 영속적 취단인 경우에도, 그 운동이 격렬하게 될 때는 대부분 반드시 군중 상태가 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군중의 관찰은 군중 자체를 이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취단 현상으로써 행동을 이해하는 것에도 중

8) 이광수, 「민족개조론」, 『개벽』22, 1922년 05월 01

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丸山鶴吉, 1926:1-2)

1919년 7월 동경제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촉탁으로서 한국에 건너와 “조선사회사정” 조사 담당을 역임했던 무라야마 지준(丸山鶴吉)의 『조선의 군중』이라는 책의 위 서문에서 무라야마는 조선에서 다수자의 정치를 조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민족주의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각종 단체들로, 후자는 “군중”이라고 구분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책은 앞선 “군중” 및 “군중심리”를 논하고 있던 다른 논의들과 달리 군중 행위를 그것이 이념적 조직체의 운동과 비교했을 때 갖는 “결여”(병리적이거나 미자각적인)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무라야마가 보기에 “군중”은 규약도, 장기적인 영속성도 결여하고 있음에도 취단으로 이루어진 다른 정치 운동이 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의외의 행동” 즉, “예측불가능성”과 “격렬함”이었다.

무라야마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같은 군중의 행태가 군중과는 다른 목적 의식을 갖는 조직 운동과 별개의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는 “질서 있는 영속적 취단인 경우에도, 그 운동이 격렬하게 될 때는 대부분 반드시 군중 상태가 되기 마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조직 운동이 격렬해 질 때는 반드시 군중이 보이는 바와 같은 의외의 행동성 즉,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목적의식적인 조직 운동으로 묶인 다수자들과 예측 불가능한 행위를 하는 군중이란 다수자들이 서로 전혀 다른 존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행위 동학 간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같은 군중 행위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조직적 운동과의 관계에서 갖는 위상은 군중의 정치가 단순히 합리성과 구심성을 “결여”한 것에서 더 나아가 예측 가능한 목적 의식적 운동을 기존 예상 보다 더 “위험한” 것이 되도록 견인할 수도 있는 매트릭스 같은 것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무라야마의 위와 같은 주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 이 시기 군중 논의들과 비교했을 때 변별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군중은 그 행위의 정체성과 패턴에 대한 사전적 규정력 즉, “영토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의 입장에서 오히려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 둘째 군중과 이들의 행위는 조직 운동이란 목표로 나아가야 할 그 前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조직 운동 안에 존재하면서 언제든지 조직운동의 논리가 다른 궤적으로 이탈할 수 있게 견인하는 힘이라는 통찰이 무라야마의 논의 속에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라야마의 이 같은 통찰은 조선의 군중이라는 텍스트 전체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자의 시선에 근본적으로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분히 함축적인 수준에서 군중을 보는 통찰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렇다면 기성의 근대주의적 틀을 넘어서서 식민지 군중의 동학을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인식론적 틀을 요구받는가? 아래에서는 식민지 군중 소요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이 같은 사례를 근대주의적 한계를 넘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도구를 제시할 철학적 논의를 확인해 보자.

3. 군중과 “사건의 철학”

앞서 우리는 근대주의적 철학이 정치의 주체로 개인, 계급, 민족을 단위로 함을 살펴보았다. 이 같은 주체들은 공통된 특징을 갖는데 그것은 바로 시공간적 규정을 받지 않는 영속적 실체의 확인을 통해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인받는다라는 것이었다. ‘자아’, ‘자본의 구조’(혹은 유물론적 역사발전의 법칙), 그리고 ‘역사’나 ‘언어’ 등이 바로 “개인”과 “계급” “민족”이 무엇인지

를 규정하는 실체들이다. 정치 주체를 접근하는 이 같은 방법론은 다분히 관념론적인 것으로서,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 지를 유동적이고 가시적인 현실 세계가 아닌 그것 너머의 공고한 어떤 것의 확인을 통해 보장받는다.⁹⁾

이런 주체들과 비교했을 때, 군중이라는 존재는 개인이나 계급, 민족 같은 주체를 규정하는 범위 밖에서 규정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 타자적이다. 군중은 그것의 생성 자체가 상황적이고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어떤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 영속성을 보통은 어떠한 이념과 조직을 통해 혹은 그 존재를 특정 지을 수 있는 대표자(혹은 선동자)에 의해 보장받으려 시도한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우발적으로 나타나 조직적 시위에 합세하여 상황을 급반전 시키거나 사소한 시비를 보고자 몰려든 군중들에 의해 경찰서가 파괴되는 식의 권력적 대치가 이뤄지는 군중의 운동 양태는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가 다른 행위를 자극 하고 촉발시켜 일어났다가, 그 자극과 촉발이 사라지면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상황적 결과라는 점에서 근대적 주체 개념의 정치 행위와 그 결이 전혀 다르다. 그것은 철저히 유동적이고 시공간에 지배 받는 그 논리 자체에 의해 자기 정체성이 규정되는 존재인 것이다.

탈 구조주의적 철학의 대표자인 들뢰즈나 전통적 맑시즘에 대한 탈구조주의적 시도를 했던 후기 알튀세르의 경우는 이 같은 방식의 존재론을 사건의 철학(혹은 우발성의 유물론)으로 설명한다. 사건의 철학은 일회적이거나 변동적인 행위들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순간 너머에서 그것의 영속적 실체 즉,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다른 것을 촉발하고 그것이 또 다른 행위를 촉발하는 행위 간의 흐름 즉 계열의 무한 반복 자체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한다(이정우, 1998; 알튀세르, 1996) .

이 같은 방식으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방식이 기성의 근대주의적 의미 논리와 갖는 차이는 어떤 의미가 행위의 반복적 촉발에 의해 생성되더라도 상황의 논리를 넘어서 고정된 실체적 원인에 의거해 역으로 상황을 추론하거나 이를 부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의 철학은 의미의 논리 구조를 우발성이라는 생성의 현장 자체 안에 내재하는 것으로 본다. 특정 행위는 자신과 성격이 다른 행위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행위 방향의 반복적 만남의 틀이 틀어지게 될 경우 의미는 언제든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발성은 동시에 의미의 역설 혹은 이중 의미를 가능하게 한다.

이 같은 탈구조주의적 철학의 논리에 따르면 “정치”란 이 같은 행위 계열 간의 만남으로서 사건 자체를 넘어서 생성될 될 수 없는 것이 된다. 여기서 군중이라는 주체와 그들의 정치 행위는 다른 어떤 정치보다도 이 같은 사건의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사건의 철학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군중은 -알튀세르의 말을 빌면- 에피크로스적 논리 즉, “공허 가운데서 운동하는 원자들이 자의적으로 직선 운동에서 벗어나는 운동을 통해 만물을 형성시킨다”는 “마주침의 유물론”을 정확히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알튀세르, 1996:38).

들뢰즈는 이 같은 우발성의 마주침을 통해 존재의 정치를 설명하는 큰 열개를 그린 후에 이 같은 행위들의 마주침이 무한히 반복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사회 구조를 만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때의 구조는 사회의 고정적 법칙으로서의 구조와는 다르다. 행위 너머의 영속적 원인에 대한 관념론적 추론으로 도출된 구조와 달리, 이들이 말하는 구조는 행위 간 마주침의 우

9) 플라톤적 세계관에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이데아의 모방이거나 그것의 재현이다. 영원하고, 자기 동일적이며 순수한 존재인 이데아가 있고 현실 세계의 물질들은 그것의 모방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한정적이고 변화하는 존재이다. 이 같은 플라톤적 존재론은 현실의 질서를 규정 짓는 토대이자 근거를 현실계 너무의 영원불변한 하나의 원인을 찾는 서구 철학의 근대적 세계관을 형성시킨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이정우, 1998)

발성과 그것의 반복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에 언제든지 다른 행위 흐름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고 그것과의 만남에 의해 항상 변이할 에너지를 전제하게 되기 때문이다(들뢰즈, 2001: 407)

아래에서는 이 같은 사건의 철학에 입각해 크게 4가지의 방식으로 식민지 군중의 정치를 분석할 계획이다. 첫째, 사건의 발발로서 ‘마주침의 정치’, 둘째, 사건의 전개로서 ‘구경꾼의 정치’, 셋째, 사건의 발전으로서 ‘변이의 정치’가 그것이다. 넷째, 사건의 효과로서 ‘이항화의 정치’가 그것이다. 여기서 ‘구경꾼의 정치’란 식민시기 군중 심리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식민자의 담론을 차용한 것이자, 그것의 의미를 탈구조주의적 방식으로 비틀기 위함이다. 군중은 특정 사건을 보기 위해 몰려들고 이 몰려드는 구경꾼을 보기 위해 다시 몰려드는 행위의 연속적 촉발 즉 사건의 전파를 가능하게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무자각적 군중의 비주체성 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특정 “흐름”과 “유행” 혹은 “신드롬”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행위의 논리이자 법칙이다. 아래에서는 이 세 가지의 논리 구조 위에서 식민지 군중의 정치를 분석한다.

4. 군중과 사건의 정치

1) 사건의 발생: 마주침의 정치와 의미의 역설

1918년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종로 소학교 내 미곡염매소에서 경찰과 수천의 조선인 군중들 사이에 투석전이 방불케 하는 소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면, 당 일 종로 소학교의 염매소에는 아침부터 1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쌀을 사려고 몰려와 종로 경찰서 순사들이 군중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이미 오후 2시경에 준비되었던 쌀이 모두 팔려 3백에 가까운 사람들은 쌀을 채 사지도 못한 채 돌아가야 하게 된다. 이 때, 권농 동구 18 번지에 살고 있던 54세 김성녀가 해산을 명령하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노파와 경찰의 싸움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던 군중들에 노파가 밀려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때 이를 목격한 이들 중 누군가가 “경관이 인민을 때려죽인 것은 불법 행위다”라고 외치게 되고, 이 말을 들은 약 2백여 군중들이 급기야 경관이 노파를 때려죽였다고 하며 순사보 하나를 에워싸고 이를 난타하게 된다. 다른 경관들이 이를 제지하려 하면서 순사들과 소학교에 모여 있던 조선인 군중들 간에 충돌이 빚어지는 사이, 조선인 군중 안에서 어떤 자 2명이 단상에 올라가 큰 소리로 군중에게 “선동적인 열렬한 말”을하자 이를 기점으로 소학교 밖의 조선인 군중들까지 학교 담장을 무너뜨리고 물밀 듯이 밀려들어가 무너진 흙과 돌을 경관들에게 던지기 시작하게 된다¹⁰⁾.

“밖으로부터 구름 같이 모여든 군중도 이에 참가하여 맹렬히 폭행을 하고 드디어 학교의 판장 삼간 나머지를 파괴하고 문패와 문까지 찢서 깨뜨리고 또 접속한 토담을 무너트려가지고 그 흙과 돌로서 경관과 학교 집을 견양대고 던져서 한참 동안은 미사 주석과 같이 되어 일장대수라장이 된바 교사 중 서북편에 세운 2층 한 채는 계상 계하가 모다 유리창이 파손되고 수십명의 사람은 교실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유리창을 타파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등 폭행이 랑자하였더라”¹¹⁾

군중의 수가 1천 여 명으로 많아지게 되자 종로서는 경무총감부 산하 헌병대 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진압에 동원시키고 이 소요는 결국 오후 8시까지 약 100여명의 사람들을 검거하는

10) 『매일신보』, 「미염매소의 폭동, 경관에게 저항하던 사나운 노파가 군중에게 밀려 넘어진 까닭으로 군중과 경관이 충돌되어 소동」, 1918년 8월 30일..

11) 위와 동일

것으로 끝나고 있었다.

당시 사건을 구조적 배경이란 관점에서 접근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식민 지배기 전 시기 동안 조선의 미가(米價)는 본토 미가에 강력하게 지배되고 있었는데, 이 같은 상황은 1918년 봄부터 시작된 일본 미가의 급등으로 식민지 조선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3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쌀값은 쌀 한 되에 40전을 기록해 8월경에는 도시 하층민들의 생활난이 극도로 궁핍해지고 언론에서는 쌀 값 때문에 좀도둑과 전염병 기승까지 염려된다고 말할 지경이 된다.¹²⁾

위 사건은 이처럼 1918년 8월 경 미가가 급등과 쌀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해지자 경성에서 경성부윤의 주도하에 “경성구제회”를 조직하고, 미곡의 염가 판매와 빈민에 대한 무상 배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었다. 당시 빈민 무상 배급은 경찰이 조사를 통해 경성 내 빈민 천명에게 40여 일치에 해당하는 쌀과 조를 무료로 배급하는 한편, 미곡 염매소를 경성 시내 9 곳에 걸쳐 설치해 시중 가격보다 싼 가격에 미곡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일 1천에서 2천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염매소에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쌀을 사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다¹³⁾.

이 같은 1918년 당시 미가 급등과 당시 민심에 대한 배경 설명은 한 당시 경성미곡염매소 소요 사건의 원인을 분석할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건의 발발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식민 지배라는 근본 모순 하에 미가 폭등에 따른 대중의 생활고가 소요의 원인이 되었다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적 접근법은 사건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행위를 촉발했던 논리 자체를 분석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자녀 교육열의 구조적 원인은 대입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거대 교육 시장의 축적된 모순에 있다. 그렇지만 당장 어떤 동네 엄마가 자기 아이를 어떤 학원에 보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 행위 촉발의 직접적 원인은 이 같은 거대 구조가 아니라 옆집 엄마의 말 한마디 - “우리 아이는 어디 보내요?”-이기 때문이다. 즉, 사건화를 둘러싼 사회 모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든 현장을 직접 추동하는 힘은 나의 욕망을 촉발하는 미시적이고 경험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거대 구조에 대한 다분히 “사후적”인 해석은 이 같은 군중의 욕망과 행위의 선택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당시 소요가 “군중에 밀려 쓰러진 노파”라는 사건이 “경관이 인민을 때려 죽였다”라는 서로 전혀 성격이 다른 이질적 인 두 사건 간의 우발적이니 마주침을 통해 시작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서로 성격이 너무 달라서 마주칠 일이 없을 것 같은 상호 논리적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두 행위의 계열이 현장 안에서 그 자체로 의도치 않게 마주치게 됨으로서 소요라는 사건화의 발화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시작된 사건은 곧바로 2백여 군중의 순사에 대한 구타를 야기 시키고 그것은 다시 그 현장을 폭압적 식민권력 대 고통 받는 피식민지민의 구도로 선명하게 결정 짓는 선동가의 발화와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소학교 밖의 군중들이 담을 무너뜨리고 학교 안으로

12) 당시 40전은 경성 거주 막노동자들의 한달 월급에 해당하던 가격으로 이 같은 문제는 당시 도시 빈민층의 극도의 궁핍과 생활난을 부추기게 된다. 관련해서 다음의 기사들을 참조. 『매일신보』, 「米價의 大奔騰, 쌀한되에 사십전이 되었다」, 19180301; 『매일신보』, 「米價高騰과 經濟生活: 二食主義를 實行하라, 하루에 두끼씩 먹는 것은 경제보다 몸에 유조하다」, 1918.3.6.; 『매일신보』, 「米價高騰과 經濟生活: 利益있는 共同購入, 싯가보다 헐하게 쌀 사는 법」, 1918.3.8.; 『매일신보』, 「米價高騰과 最 급문제(2): 전유했을 幾多惡影響, 전염병의 염려, 좀도둑의 근심」, 1918.8.3.

13) 『매일신보』, 1918. 8. 17. 「구조 방법의 결정」; 『매일신보』, 「廉賣방법개정주 지금까지 폐해를 참작 하여 쌀파는 것은 백미소 매상에게 위탁하여 구월 일일부터 실행」, 1918. 8. 29.

진입하도록 하는 촉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것이 결국 1천여 군중의 폭력 난동과 헌병 분대의 진압이라는 전형적인 식민지 대중 소요라는 사건으로 완성된 것이다. 즉,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논리적으로 엄밀한 연관성이 없는 이질적 계열 간의 우발적 마주침과 그것에 의한 또 다른 사건의 연쇄적 촉발이라는 계열화의 반복된 과정이 군중을 구성시키고 움직이게 한 주요 ‘동학’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군중 소요의 의미에 대해 일반적으로 크게 두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는 우민한 식민 대중의 유언비어에 따른 순간의 소란으로 취급해 이를 격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정 반대로, 식민권력의 폭압성에 대항한 대중들의 항거 의식으로 격상시켜 해석하는 것이다. 이 중 격하의 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사건의 최초 발단이 되었던 김성녀라는 노파를 매일신보가 보도하는 방식이었다. 기사는 이 노파가 그 같은 일대 소요의 촉발제가 되었음에도 실재 본인은 아무런 목적의식이나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 같은 노파에 대한 기사는 종로경찰서에 선동자들로 지목이 되어 구속되었던 100여명의 군중들에 대한 보도와 함께 게재되고 있어 당시 사건이 그야말로 무지한 노파와 더 무지했던 식민지 군중이 만들어낸 일대 해프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¹⁴⁾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군중의 행위를 어떻게 의미화해야 할까? 위 해석의 반대 급부 논리 즉, 식민지 세력의 억압적 행정에 대한 민중의 항거로 의미화 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만 이는 당시 사건이 보여주었던 군중 정치 행위가 갖는 우발성의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현장의 논리를 넘어서서 거대 구조만을 가지고 현장을 그에 부속하는 어떤 것으로 환원시켰을 때만 가능하다. 즉, 이 같은 접근 하에서 군중의 정치는 언제나 특정한 목적의식성이 일정하게 이들에게 존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 그 정치의 의미를 결정 당하는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소요가 극도로 개인적일 수 있는 비정치적 사건(노파의 군중에 의한 쓰러짐)이 이를 극단적으로 정치적인(순사에 의한 노파의 죽음) 것으로 이해했던 군중과의 우연한 마주침에 의해 발발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위 사건이 식민시기의 다른 무수한 군중 소요들 처럼 ‘의식 없는 해프닝’과 ‘민족적 항거’라는 과잉 의식의 경계에 존재하는 “이중 의미”의 역설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군중의 정치는 위 사건이 담고 있는 전형적 의미화와 무의미화의 요소를 모두 담지한 채, 그 중 어느 계열로 사건이 결정되어질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움직이는 것이다. 소요 과정에서 선동적인 발언을 했던 의식적 행위자의 계열과 행위 자체의 물결에 촉발되어 휩쓸려 갔던 비의식적 행위자의 두 계열 모두가 당시 사건의 ‘의미’로 공존하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같은 의미의 역설을 배제하는 순간 군중의 정치가 가진 논리의 “특이성”은 설명되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우발성’과 ‘의미의 역설’은 식민지 공간 곳곳에서 특히 3.1운동 이후 1920년대 기간 동안 매우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1924년 5월 21일 경성 시내 우미관(優美館) 앞에서는 천여 명의 조선인 군중이 순사 2명을 난타해서 이 순사가 군중을 향해 칼을 휘두르다 급기야는 본서로 도망가 수 십 명의 응원병력을 데리고 와서야 겨우 군중을 해산시키는 사건이 발생한다. 태평로 대로변에서 수천 군중이 일본인 순사 2명을 집단 난타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앞서 보았던 어떤 소요들 못지 않은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결국 양편에 부상자도 없고 군중은 모두 즉시 흩어졌기 때문에 붙잡힌 사람도 없이 끝나고 있었다. 당시 사건은 사직동에 사는 “김호성(27세)”이란 사람

14) 『매일신보』, 「미염매소의 폭동, 경관에게 저항하던 사나운 노파가 군중에게 밀려 넘어진 까닭으로 군중과 경관이 충돌되어 소동」, 1918년 8월 30일

15) 들뢰즈 “사건의 철학”과 “의미의 역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정우(1998)를 참조.

이 당 일 술에 취해 등불도 없는 차를 끌고 우미관 앞을 지나던 행인을 폭행하자 순사들이 그를 파출소로 데려가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김호성이 “힘도 세일 뿐 아니라 술 먹은 김에 파출소를 깨트릴 기세”여서 파출소에서 다시 본서로 이동하는 도중 그가 당시 순사와의 동행을 거부하며 저항하자 이 때 “야시에 모였던 군중” 중에서 “술 먹은 사람을 끌고 갈 것이 무엇이냐”고 순사에게 달려들기 시작하며 벌어진 사건이었다.¹⁶⁾

‘술 취한 행인과 경찰의 실랑이’를 ‘조선인에 대한 순사의 폭행’으로 해석했던 “야시 군중”과 “순사” 간의 만남은 결국 식민권력에 대한 피식민지민의 대항이라고 구도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는 식민지 군중의 정치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발발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 같은 예측 불가능성이 앞서 사례와 마찬가지로 두 사건 간에 논리적 연관성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술에 취해 자동 차로 행인을 위협했던 조선인’과 이를 연행해 끌고 가려던 ‘순사’ 간의 실랑이를 순사의 조선인에 대한 일방적 탄압으로 보았던 조선인 군중의 해석 사이에는 서로 직접적 연관이 없는 상이한 계열들도 서로 마주칠 수 있게 하는 정치 논리 즉 ‘우발성의 정치’가 작동한다.

이런 이유로 당시 사건을 어떻게 “의미화” 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논리적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게 된다. 한편에서 이는 3.1운동 이후 경찰 권력에 대한 민족적 저항의식의 잔존이라는 다소 전형적인 의미 계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반면, 행위 논리 자체만을 두고 접근할 경우 순전히 대중의 오인에 의한 식민 공간의 정치적 해프닝으로서 의미부여의 시도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격하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정치가 가진 비예측성과 의미의 역설이 바로 군중이 주체가 된 사건의 고유한 논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기도 한다. 군중의 정치를 ‘대중주의적’이거나 혹은 그와 정반대로 ‘엘리트주의’적 방식으로 규정하고 그 위에서 포섭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미 그 양자 어디에도 정확히 해당하지 않는 또 다른 사건을 “생성”하면서 “탈주”한다(들뢰즈, 2001:414).

그런데 군중의 정치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건화의 과정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군중이라는 다수자의 형성, 즉 ‘수적인 증식’의 과정이 전제되어 있고 이 같은 수적 증식 없이는 사건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카네티는 이 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갑자기 생겨난 군중, 이것은 신비스럽고도 보편적인 현상이다. 몇 사람(다섯, 열 또는 열둘, 그 이상은 아니다) 정도야 서로 가까이 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아무런 발표도 없었고, 무언가가 기대되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새까맣게 운집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마치 모든 길은 그쪽으로만 통한다는 듯이 사방에서 도도히 흘러들어온다.”(카네티, 2012: 18-19)

우리가 보았던 사례들에서 특정 목격자는 다른 목격자를 불러 모으고 그 목격자의 특정 행위는 그와 유사한 또 다른 행위를 촉발시킨다. 그리고 이 같은 다수자가 개별자들 전체로서가 아닌 개체성을 넘어서거나 이를 망각한 ‘수’ 그 자체가 되도록 하는 증식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피식민자 대 식민권력이라는 매우 단순한 이항 대립의 구도를 만들어냄으로서 그 자체로 사건을 공론화시키고 있었다. 그렇다면 식민지의 일상 공간에서 개별자로 존재하던 이들을 이처럼 하나이자 동시에 무한자라는 이중적 다수자로 “증식”시킬 수 있게 했던 동학은 무엇이었을까?

16) 『동아일보』, 「優美館 前에 대 활극. 순사 두 명과 천여 군중이 일장의 풍파를 일으키었다. 순사는 발검 본서는 응원출동」, 1924. 5.21.

2) 사건의 전개: 구경꾼의 정치와 욕망의 구조



아래의 그림은 『매일신보』에 군중심리라는 제목 하에 실린 만평이다. 이 만평에서는 어떤 주인공이 “오늘도 한잔 해야겠는데”라며 별 생각 없이 길을 나선다. “어딜 가야 술 한 잔을 얻어먹을 수 있나”하며 길을 가는 도중 주인공은 자신의 의지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점점 사람들이 모여드는 틈새에 함께 섞이게 된다. 사람들이 향하는 무리에 섞여 주인공은 그저 옆에 같이 몰려가는 아이에게 “애 저기 뭐가 있나 보라”라고 물을 뿐 특정한 목적의식이 없다. 주변에 셋 정도이던 사람이 넷 이 되고, 10명이 되어 곧 무수한 인파에 끌려가면서도 주인공은 그저 자신이 아는 어떤 지인의 “생일이 언제더라”라는 다른 생각에 여념이 없다. 그 인파 속에 눌러 함께 끌려가던 어떤 키 작은 사람이 “웨들 뭐 먹을게 있다고 덩쳐 두르는게에”라며 불평을 하지만 인파는 줄어 들지 않고 한 곳을 향해 점점 불어나 몰려간다.¹⁷⁾

위 만평의 첫 그림 등장하는 주인공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일상적 호기심과 욕망을 넘어서는 특정한 정치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것을 자기도 보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이끌려 무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조차 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평에 생략되어 있는 무리의 다른 한 방향과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상상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를 고려한다면 무언가 사건이 일어났고 군중의 운집 자체로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시감이 들게 한다.

그러나 이 만평이 실재 의도하고 있던 것은 조선에서 1920-30년대에 일어나던 잦은 군중 소요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행위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으며 또한 그렇기에 결과적으로도 얼마나 무시될 수 있는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에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군중 소요 행태의 저변에 흐르는 논리를 당시 식민자 세력은 조선인 사회의 “구경꾼 심리”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17) 『매일신보』, 「군중심리」, 1934.1.22

“한번 언쟁이 시작되면 당사자들은 음식점 앞 노상에서 상대하고 그 주변에는 거의 10여인에서 100여인의 사람들이 이들을 에워싼다. 언쟁의 시간은 20분, 30분 길게는 한시간도 넘는다. 구경꾼들은 호기심에서 언제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 많아 진다. 노상에는 사람의 산, 말도 차도 걸기를 멈추고 서서 교통차단이 되는 모양인 것이다”(丸山鶴吉, 1926: 211)

파출소 앞에서도 이 같은 행태는 군중 운집의 중요한 동인이라고 설명된다.

경성황금정 사정목 파출소에서 내선인 경관은 말하길 “그 끝에는 수백의 군중이 즉시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사람들이 모두 호기심을 가진 자로, 무언가 일이라면 발리 이를 보고 싶고 말하고 싶은 사람인 것으로, 조선인의 침소봉대 하는 과장법인 것으로, 무언가 어떤 사고로 파출소에 검거된 자도 예를 들면 “야! 강도가 잡혔다” “ 권총을 가진 놈이다” “ 체포하는 순사와 격투해서 피가 흐르고 있다” “파출소에서 순사가 교대로 구타하고 있다” “일본인 순사가 때리고 있다”등과 같은 소리르 크게 외쳐서, 군중이 보이는 한편, 이 중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부근 사람들을 불러오는 자가 있다.(丸山鶴吉, 1926: 212)

이 같은 구경꾼들은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색다른 것을 보고 알려는 호기심”에 의해 만들어지며 수가 많은 만큼 그 수는 더 큰 수를 불러일으켜 “언제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 많아진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같은 많은 수의 구경꾼이 몰려들게 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점이었다. 누군가 길거리에서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는 일이 이 같은 무수하게 늘어나는 “구경꾼들”의 운집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면 피검거자의 한패가 그 사이 피검거자를 탈환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관의 횡포 또는 폭행’은 곧바로 모여든 군중들을 더 불러 모아 하나의 집단이 되어 “파출소를 포위하고, 소란이 극에 달하고, 투석, 파괴, 난입, 반항을 감행해서 제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사회사건으로 발전되는 것이었다(丸山鶴吉, 1926: 212).

식민자 담론이 이 같은 ‘구경꾼 심리=조선 군중의 심리’라는 등치를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이들 군중의 운집 안에 어떠한 정치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교육받지 못한 무지한 이들의 유언비어와 “침소봉대”가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들었다고 하며 사건 자체의 무의미를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타르드(Gabriel Trade)의 논리 그리고 타르드를 통한 들뢰즈의 미시정치에 대한 논리에 근거했을 때, 이 같이 남이 본 것을 나도 보고자 하는 욕망, 즉 ‘모방의 욕망’은 자기 주체성을 결여한 무지한 행위라는 규정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적 발견을 사회적 사실’로 변화시켜 ‘새롭게 등장한 의견’이 형성되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미시적인 사회 동력이기 때문이다(타르드, 2016: 200-201). 이들이 보기에 모방의 욕망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사회를 만들며 사회의 특정한 “구조”를 형성시킨 미시적인 “흐름”이자 “파동”인 것이다. 남들이 하는 것을 나도 하고 자 하는 모방에의 욕망 즉, 어떤 것이 다른 것을 동일하게 증식시키는 무수하게 반복되는 행위는 한 사회를 특징짓는 거대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흐름”이자 “파동”이다. 따라서 이 같은 맥락에서 군중은 모방, 즉 하나가 다른 하나를 촉발해 만들어내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거대한 정치적 대세(=큰 흐름 혹은 파동)의 주체로 설명된다(들뢰즈, 2001: 416-417)

사회구조에 대한 이 같은 미시정치적 접근 하에서 봤을 때, 식민자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있던 “구경꾼 심리”는 따라서 쉽게 경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증폭이 마치 전염병처럼 커져갈 때, 어떠한 권력자도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사회를 뒤흔들게 되는 것이 된다. 이 같은 위력적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은 일종의 파동으로서 모방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가 이른바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행위 법칙의 규칙으로서 찾아내는 공리적 구조와 다

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체의 행위를 규정하거나 결정하는 행위 너머에 존재하는 초월적 구조가 아니라 욕망이라는 분출하는 운동 행위의 “배치” 자체이다. 따라서 이 같은 욕망의 구조 내부에서 행위 간 마주침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하거나 그것이 전혀 다른 성격의 행위와 마주치게 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군중의 정치는 이 같은 욕망의 흐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건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의 증폭을 가능하게 하는 모방의 욕망 즉, ‘구경꾼의 정치’는 ‘새로운 사건’으로의 ‘변이’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늘 위험하다. 구경꾼이 다른 구경꾼을 불러 모아 그 수자가 엄청나게 커졌을 때, 혹은 구경꾼이 증식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구경꾼들이 거기에 가세하게 되었을 때 구경꾼들이 보고자 했던 원래의 사건은 이후 전혀 다른 것이 되어 가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모방과 반복을 통한 수의 증폭 과정에서 형성되는 사건의 ‘변이’ 사례를 더 자세히 살펴본다.

3) 사건의 발전: 변이의 정치

1928년 경남 거창군 위천면에서는 농민 삼천여명이 같은 군 내 다른 면민 간에 농지 비료로 쓸 풀의 채취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출동했던 무장 경관대와 농민들이 충돌하게 된 사건이 일어난다. 당시 사건은 1920년대 신문 지상에 자주 등장했던 “녹비분쟁(綠肥 分爭)”이라고 일컬어지던 여러 사건들 중 하나로써 1920년대 중반 경부터 본격화된 산미증산계획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풀을 비료로 사용하는 록비 재배를 농민들에게 장려하면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문제는 이 녹비를 채취할 수 있는 임야의 경계가 새로운 식민 행정 단위였던 면을 기준으로 -기존 생활구역을 무시한 채- 임의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특정 면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임야를 둘러싸고 해당 면 소유 임야의 농민들과 -녹비 채취 임야를 충분히 갖지 못한- 다른 면 농민들 사이에 이 채취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자주 시비가 붙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었다.¹⁸⁾

문제의 발단 자체가 식민 행정의 불합리함이라는 거시 구조에 기반하고 있긴 했지만, 사건 자체의 발발은 더 많은 풀을 채취해 녹비로 쓰려는 면민들 간의 욕망의 충돌이 촉발제가 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욕망에 의한 사건의 촉발은 원래 사건을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끌고 가거나 변이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풀싸움은 처음에는 서로 다른 면의 농민들 수 십 여명 사이에서 일어나다가 이것이 각자 자기 면의 다른 면민들을 동원하게 되면 두 면의 군중들 간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최초의 사건 과정에 경찰이 제재를 목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두 면민 간의 사건이 농민들 대 경찰들 간의 무력 충돌로 변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¹⁹⁾

아래에서 보게 될 위천면의 경우도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했다. 당시 사건은 위천면에서 1928년 당해 년부터 위천면 행정 구역 안에 속한 금원산에서 나는 풀을 다른 면 농민들이 이를 베어갈 경우 그 풀에 대해 풀 값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에 인근 마려면 주민들이 분노하면

18) 경남 거창에서 渭川과 北上 兩面민 간의 싸움이 그 대표적 경우였다. 『동아일보』 「兩面農民 大活劇, 草肥採取問題로, 郡守 署長도 現場에 出現(居昌)」, 1926-05-31.

19) 녹비 분쟁으로 인한 소요들은 다수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1926년 6월 5일 경에 발생했던 하동군 악양면과 청암면민 간 싸움에 순사부장이 개입해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하고 다수 농민들이 검거된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다. 『동아일보』 「兩面民의 풀쌈, 巡査는 負傷 面長은 逃亡, 河東郡 岳陽 靑岩 兩面에서」, 1926.6.10.

서 시작되고 있었다. 당시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던 거창군은 이 문제에 대해 면민들의 전통적인 생활 권역의 논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 단위에 대한 기계적 고려 위에서 위천면의 편을 들게 된다. 이로 인해 1928년 5월 23일 금원산에서 무상으로 풀을 베려고 시도하던 마려면민들과 이를 제지하려던 위천면민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각 면의 농민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숫자가 양쪽에 각기 붙어 3천여 명으로 군중이 늘어나게 될 즈음, 거창서에서 무장한 경관들이 이를 제지하고자 금원산으로 파견된다. 이 때 마려면민들은 그대로 해산이 되었으나, 여전히 남아있던 1500여명의 위천면민들 중 여전히 분을 삭히지 못했던 누군가가 경관의 저지에 “무장을 하고 온 것은 사건을 해결코저 한다는 것보다 민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항의하게 되고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중과 경찰들 사이에 폭력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다. 결국 경찰에서는 인근 함양경찰서에 지원 요청을 해서 15명의 무장 경관이 더 투입되고 사건은 경관과 농민들 사이에 각기 2,4명부상자가 발생하고 50여명의 농민이 검거되는 것으로 끝나고 있었다.²⁰⁾

이 사건이 군중의 정치 동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구경꾼이 되고자 해당 사건에 참가하게 된 군중의 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그 같은 수의 증식 과정에서 이 군중이 예상치 못했던 다른 성격의 행위 흐름(무장 순사들의 개입)과 섞이게 될 때, 기존 사건의 파동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장한 경찰들과 풀 시비로 흥분해 있던 농민들 간의 “교잡”은 ‘피식민지민 간 갈등’의 상황을 ‘피식민 조선인 대 식민권력’ 간의 형사 사건으로 비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²¹⁾

1931년 5월 25일 논산군 양촌에서 일어났던 “군중에 의한 경관대 포위 사건” 역시 군중 정치의 동학이란 맥락에서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당시 사건은 논산군 양촌에서 노동조합을 창립하고자 창립대회를 신고했던 조합 측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를 계속 거부당하자 이에 분노한 70여명의 노동자들이 25일 0시경 “적기(赤旗)”를 선두에 들고 “○○○○” 만세를 연호하며 양촌 시가를 돌며 시위운동을 하다 경관대와 충돌한 사건이었다. 당시 기사가 검열로 인해 만세의 구호가 삭제된 채 게재되고 있었지만, 당시 사회 맥락상 “사회주의”나 최소한 그와 유사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추측케 하고 있었다.²²⁾

기사 내용에 따랐을 때, 사건의 초기 성격은 명백히 1920-30년대 초반까지 조선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던 전형적인 사회주의 사상을 내건 목적의식적으로 ‘계급’ 운동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노조 관련 사건이 ‘군중 소요’의 방식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발생한다.

“구경꾼까지 합세하여 수백명 군중이 대혼잡을 이루어 일시는 형세가 자못 위급하였다하며 경관은 적기를 압수해다가 다시 군중에게 빼앗겼으며 권영민 리지용 등을 검거하여 강경 경찰서로 압송하라는 것을 군중들이 포위하고 전기 2인을 탈취하는 등 기세가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은 논산 강경 등지에 응원을 구하여 겨우 해산을 시켰다”²³⁾

즉, 초기에 70여명에 불과했던 시위자의 수는 이들과 순사 간의 싸움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던 “구경꾼들”의 가세에 의해 수자 자체가 대폭 증가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가지고 있던 기존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기도 했다. 그것은 사건 자체의 규모가 커지고 보다 폭력적으

20) 『동아일보』, 「鎭撫中の 경찰대와 삼천여 농민이 충돌」, 1928. 5. 25; 『동아일보』, 「全 署員 활동 오십명 검거 녹비분쟁으로 경관과 충돌한 거창금원산 충돌 후문」, 1928. 6. 1.

21) “교잡”의 이론적 의미와 관련해서는 타르드(2016: 80-81) 참조.

22) 『동아일보』, 「군중이 경관대포위. 押送 청년을 탈환. 응원경관대도착. 대검거거작수」, 1931.5.30.

23) 위와 동일.

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계급적 성격을 명확히 가진 시위가 보다 ‘대중적’인 것으로 변했다는 측면에서도 그랬다.

군중의 수에 놀란 경관은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적기”를 뺏었다가 다시 탈취당하고, 선두에 있던 두 인물(권영민 리지용)을 검거해 강경 경찰서로 압송하던 것을 군중에게 포위당해 다시 탈취당하는 등 경관과 군중 간의 밀고 당기는 무력 투쟁으로 사건의 양상이 완전히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타 경찰서의 지원으로 겨우 해산되었는데, 강경 경찰서는 25일 밤 오전부터 28일까지 3일에 걸쳐 관련자 수십 명을 검거하는 등 진압에 부심했다고 보도되고 있었다.²⁴⁾

이처럼 노동자들과 경관들의 실랑이를 보고자 몰려들었던 “구경꾼들” 즉, “군중”이라는 흐름과 노동자라는 “계급”의 흐름 간의 “교집”은 70여명에 불과했던 시위대를 수백의 군중으로 증식시켜 사건 자체를 확대시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계급’의 정치가 ‘대중’ (혹은 군중)적 성격을 가지고 ‘변이’되도록 만들고 있기도 했다.

4) 사건의 결과: 이항화의 정치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군중 소요들 즉, 우발적 마주침에 의한 사건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변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군중 정치의 한 효과는 바로 정치적 대립 구도의 선명성과 ‘이항성’이다. 사건이 몇몇 개별자들 간의 관계에서 최초로 형성되었을 때, 이들 개별자들에게 존재했던 각각의 사연은 이 사건을 보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증식될수록 ‘이편’ 아니면 ‘저편’이라는 방식으로 선명하게 나뉘지면서 의미를 잃게 된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사건들, 즉 최초 발단이 특정 ‘조선인’과 ‘순사’ 간에 발생한 사건들일 경우, 최초의 동인이 식민권력의 조선인에 대한 폭력 이외의 다른 변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조선인 군중들이 수천으로 불어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경찰의 수가 그에 폭력적으로 대응해 불어나면 날수록 상황은 더 명확하게 ‘조선인 대 일본인’ 혹은 ‘피식민자 대 식민권력’이라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된다. 이 같은 군중 정치의 속성을 카네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군중이 자신을 존속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때로는 유일한 가능성은 그와 관련된 제2의 군중이 존재하는데 있다. 두 군중이 운동 경기의 경쟁자로서 힘을 겨루건, 아니면 서로 심각한 위협을 주고 받건 간에, 제2의 군중을 목격하는 것, 혹은 단지 그 강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제1의 군중의 와해가 저지된다”(카네티, 2012: 82-83)

이 같은 이항대립은 내용적으로는 도덕적 의미를 강하게 갖게 되어 “옳거나 그르거나” 혹은 “맞거나 틀리거나”라는 가치평가의 문제가 되면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 한 지속되거나 혹은 더 강화된다.

이 같은 이항화와 가치평가의 정치로서 군중 정치의 성격은 식민 사회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식민사회라는 사회 지형의 특징 상, 민간 일본인이나 일본인 순사 및 관청과의 일상적 충돌이 널려 있던 공간에서 이 같은 군중 정치의 이항화는 훨씬 더 극단적이고 더 빈번하게 나타날 여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인 구경꾼들의 가세로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에 놀라 식민자 세력이 이를 무력으로 대응하거나 응원군을 부르려 할 때, 특히 파출소라는 공간 권력이 이용되어 군중에 대응하고자 할 때, 이 같은 이항 구도는 보다 선명해지고 있었다.

24) 위와 동일.

예를 들어, 1930년 12월 2일 경남 진주군 대곡면 단목리에서는 동민 백여명이 동면 주재소를 습격하여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파괴한 사실이 돌발한 사건도 파출소라는 공간적 조건이 군중의 수를 더욱 증폭시켜 식민권력 대 피식민지민이라는 구도를 더욱 선명히 한 사건이었다.²⁵⁾

당시 사건은 일본인 전매국원 관리가 연초밀매범 하만식을 잡아 주재소로 끌고 가다 그가 계속 동행을 거부하자 단목리에 있는 술집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그에게 물고문을 자행하며 자백을 강요하면서 시작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하만식의 친척들 6인이 하만식의 고문을 중지하고 그를 풀어달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었지만 인근에 장사를 나갔다 술집에 돌아오던 동민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점점 그 수가 늘어나 전매국원의 힘만으로는 이를 대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동면 주재소에 응원을 청해 순사부장이 그를 주재소로 호위해 가 권력 기관을 버팀목으로 대응하면서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있었다. 조선인 군중의 수는 백여명으로 늘어나 “전매국원을 내여달라고 돌을 던져 창문을 파괴하고 등불이 꺼져 암흑한 중에 약 두 시간 동안이나 소란”을 피우기에 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당시 사건은 주모자(하만식 이하 친척 3명)를 구속하는 것으로 결국 끝나고 있었지만, 특정 관리의 개별 조선인에 대한 폭력이 조선인 군중의 수를 확장시켜 ‘피식민자 세력의 식민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이항 대립의 구도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파출소라는 권력 공간의 비호가 촉발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²⁶⁾

이 같은 사례가 보여주는 군중 정치의 결과적인 이항성은 군중의 정치가 언제나 우적의 구분이라는 선명성과 도덕적 가치론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것은 식민권력이 그 대당에 있었을 때는 권력에 대한 ‘전복’의 흐름이 되어 개별자나 특정 조직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군중에 의한 “영웅”의 정치를 형성시킨다(타르드, 2012: 169)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군중의 정치가 식민권력과 관계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그 관계에서 형성된 “우리”가 식민 공간 내의 다른 타자 집단과의 관계로 전이될 때, 순수한 “폭력”의 정치를 형성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른바 만보산 사건으로 이야기되는 1931년 배화 사건이나 1920년대 신문 지면을 지배했던 형평사 운동에 대한 농민 소요 사건들이 그 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중이 사건의 정치 속에서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구도의 이항성과 그 안에 내재된 도덕주의적(가치론적) 경향은 우리에게 군중의 정치가 가진 정치적 위력의 양면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했다.

5.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1920-30년대 식민 공간에서 발생했던 조선인 군중 소요들을 군중의 정치 동학은 무엇인가라는 문제 설정 위에서 크게 4가지의 개념 틀에 의거해 분석해보았다. 이 같은 분석은 군중을 개인의 ‘상실’이나 계급 혹은 민족의식의 ‘결여’라는 근대주의적 주제관에 입각해 접근하는 방법론적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 했던 것으로서,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건의 철학”이라는 이론적 문제의식에 입각해 식민지 군중의 동학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당시 소요 사태들을 분석했을 때, 1920-30년대 식민지 군중 소요들은 사건의 발발과 전개 발전 그리고 결과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발성과 구경꾼 심리(혹은 욕망) 변이와 이항화라는 동학에 의거해 그 정치가 설명될 수 있다고 접근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 같은 접근의 과정에서 기성 식민지 정치사 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발굴해 사건의 철학이라는 틀 위에서 접근했을 때, 이 같은 역사적 사례가 어떻게 기존과 다

25) 『동아일보』, 「연초비원의 혐의로 전매국원이 고문」, 1930년 12월 6일

26) 위와 동일.

른 방식으로 “의미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 시도했다. 이 같은 시도는 기존의 식민지 “정치” 연구들이 제도나 법, 사상과 인물이라는 구심적 실체와 그것의 실증화에 많은 부분 의존해 있는 방법론적 경향으로 인해 하위 주체의 “정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술적으로 일정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6. 후속 연구: 군중 정치의 이항화와 폭력(반동)적 군중 연구

(1) 문제의식

1) 사건의 정치로서 군중 소요

- ▶사건의 발생: 마주침의 정치와 의미의 역설
- ▶사건의 전개: 구경꾼의 정치와 욕망의 구조
- ▶사건의 발전: 변이의 정치
- ▶사건의 결과: 이항화의 정치

2) 이항화의 정치와 군중의 이중성.

군중 정치가 보여주는 주요한 특징의 하나로 “이항성”의 논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군중 정치의 초기 촉발 과정은 특정 개인과 개인간의 여러 변수와 요소에 의한 타툼으로 시작되더라도 이것이 집단화하여 다수자[군중]의 정치가 되는 순간, “개인”이란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판단과 의견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이편과 저편”, “아군과 적군”의 구도로 구도 자체가 매우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항성”의 논리는 곧바로 “도덕주의”적 성격을 띄게 된다. 이해의 대립을 넘어서 가치의 대립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군=선, 적군=악. 우적의 정치로서 군중 정치가 가진 이항적 성격은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드러난다. 영웅적 전복의 정치. 폭력적 반동의 정치. “영웅으로서의 전복적 군중”과 “폭력으로서의 반동적 군중”은 군중 정치가 가진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속성으로서 이 둘은 언제나 함께 한다. 그러나 식민 공간에서 “폭력적 반동 군중”에 대한 연구는 특정 사례들에 대한 개별 연구를 넘어서- [군중]이라는 보편 이론적 범주에 대한 문제의식 위에서 이를 접근하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은 편이다.

(2) 이항 군중의 폭력(반동)성과 사건들: 1920년대 반형평사 소요.

1) 반형평사 소요에 대한 기존 접근

- ▶ 형평사 운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연구되는 방식(김일수 2003, 고숙화 1992, 강창석 1993)
- ▶ 백정에 대한 거시적 사유구조에 대한 서사적 접근(김중섭 1994)
- ▶ 특정 정치적 환경 하에서 조직화된 농민 단체의 주체적 역할에 주목하는 연구(최보민).

2) 기존 연구의 특징.

- ▶ 형평사 운동의 반대 급부적 운동으로 그 의미에 주목하지 못하는 방식
- ▶ 거시 사유구조 및 특정 주체 집단의 역할에 주목하는 방식.

⇒ “군중”소요가 가진 “상황적”이고 “관계적”(상호 촉발) 성격을 고려하지 않음,
 ⇒ 폭력적 군중 역시 길거리에서 일어난 식민권력에 대한 전복적 군중만큼 “우발적”으로 형성
 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논리를 간과함.

3) 연구 계획

거시(역사 누적적)적 심리 구조와 특정 집단의 역할을 매우 중요함. 그러나 그것 자체가 소요
 라는 “사건 자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특정한 폭력과 그것이 불러일으
 킨 다른 폭력들 간의 내적인 자동 연쇄적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각되는 “우/적”의 구도
 와 “혐오”(증오)에 주목해서 다음의 사건들을 분석할 계획임.

날짜	소요 내용
1923.8.23	김해 농민 소요
1923.5.30	진주 농충 소요
1925.8.15.-11월	경상북도 예천군 농민 소요
1926.5.4	서산해미 읍리민 소요
1926. 55	부여군 홍산면민 소요
1926.7.6	강경과 부 근민에 충돌 소요
1926.7.11	이리시민 소요 사건
1927.8.13.	전북 김제 洞民 소요
1927.8.15.	충남 홍성군 결성면 동민 소요
1928.7.25.	전북 임실군 둔담면 오두리동민 소요
1928.8.23	충청남도 예산군 소요
1929.5.31	경성북도 달성군 창동 동민 소요
1929.5.31	전라남도 광주 소요

참고문헌

<1차 자료>

『東亞日報』, 동아일보사 편.

『每日申報』, 매일신보사 편.

『中外日報』, 중외일보사 편.

김현준(1931), 「(文化科學)示威運動과 群衆心理」, 『新東亞』 제1권 제1호.

이광수(1922), 「민족개조론」, 『개벽』22, 5월 1일.

中村古峽(1931), 「群衆心理と犯罪」, 『警務彙報』 304.

樋口秀雄(1913), 『群衆論』, 中央書院.

丸山鶴吉(1926), 朝鮮總督府官房文書課 編, 『朝鮮の群衆』. 京城:朝鮮總督府.

<2차 자료>

Canetti, Elias(2012). 강두식·박병덕 역 『군중과 권력』, 바다출판사.

Deleuze, Gilles(2001), 김재인 역, 『천의 고원』, 새물결.

Le Bon, Gustave(2014), 이상돈 역, 『군중심리』, 간디서원.

Tarde, Gabriel(2012), 이상률 역, 『여론과 군중』, 지도리.

- (2016), 이상률 역, 『모방의 법칙』, 문예출판사.
- 김제정(2014), 「식민지기 '지역'과 '지역운동' -1930년대 초반 경성지역을 중심으로 -」, 『郷土 서울』.
- 알튀세르(1996), 『철학과 맑스주의: 우발성의 유물론을 위하여』, 새길.
- 윤해동(2004),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 이정우(1998), 「들뢰즈와 사건의 존재론」, 『시대와 철학』9권1호.
- 전성현(2020), 「일제강점기 식민권력의 지방 지배 '전략'과 도청이전을 둘러싼 '지역정치」, 『사회와 역사』126.
- 지수결(1996), 「일제하 공주지역 유지집단의 도청이전 반대운동(1930. 11~1932.10)」, 『역사와 현실』20.
- 천정환(2008), 「근대적 대중지성의 형성과 사회주의 (1)」, 『상허학회』 22.
- 허수(2010), 「1920~30년대 식민지 지식인의 '대중' 인식」, 『역사와 현실』 77.

< 후속 연구 참고문헌>

- 강창석, 「형평사 운동 연구」, 『동의사학』7-8합본, 1993.
- 고숙화, 「예천 사건을 통해 본 일제하의 형평운동」, 『박영석교수회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 논총』, 1992.
- 김일수, 「일제강점기 '예천형평사 사건'과 경북 예천지역 사회운동」, 『안동 사학』8, 2003.
- 김재영, 「일제강점기 호서지방의 형평운동」, 『충청문화연구』18, 2017.
- 김중섭, 「한국의 백정과 일본의 피차별 부락민의 비교 연구」, 『현상과 인식』 38, 2014.
- 김중섭, 『형평운동연구-일제 침략기 백정의 사회사』, 민영사, 1994.
- 김희곤, 「金南洙(1899~1945)와 안동지역 사회주의 운동」, 『한국 근현대사 연구』 21, 2002
- 윤상원, 「한국 역사학계의 만보산사건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문학』51, 2016.
- 윤상원, 「만보산 사건과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의 중국 인식」, 『한국사연구』 156, 2012.
- 윤해동, 「“만보산 사건”과 동아시아 “기억의 터” -한국인들의 기억을 중심으로-」, 『사이』14, 2013.
- 이상경, 「1931년의 '배화(排華)사건'과 민족주의 담론」, 『만주학회』11, 2011.
- 전우용, 「한국 근대의 화교 문제」, 『한국사학보』15, 2003.
- 전흥우, 「일제강점기 강원지역 형평운동(衡平運動)」, 『인문과학연구』38, 2013.
- 조휘각, 「1920년대 자유 평등운동 연구 : 형평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倫理 研究』 42.1, 1999
- 최병도, 「萬寶山 사건 직후 華僑排斥事件에 대한 日帝의 대응」, 『한국사구회』156, 2012.